

민주당, 입찰제도개선안 발표 공공공사 낙찰률 하한선 상향 조정

정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제값 받고 제대로 공사하는 건설공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김원길 선대위정책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공사물량이 줄어든 데다 업체수가 증가하면서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실공사비보다 25%나 낮은 선에서 결정되어 부실공사의 우려와 함께 건설산업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제값 받고 제대로 공사하는 건설공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입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0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 하한선을 예정가격의 73%, 1,0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은 예정가격의 78%,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은 예정가격의 83%, 100억원 미만 공사는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고, 1억원 미만 수의계약대상 소규모 공사의 낙찰률 하한선도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원길 위원장은 2단계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틀이 형성되어 기술력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건설업체가 우대받도록 현행 PQ 및 적격심사제의 업체 선정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해 낙찰률을 추가로 2~5% 가량 상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원길 위원장은「건설공사 입찰제도는 최저가낙찰제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확대하면서 내년부터 1,000천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고 과도기적으로 현재의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낙찰률 하한선을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최

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전환되면서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신규업체의 입찰참여가 원천봉쇄된 점을 감안하여 1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중소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기준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저가하도급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원도금액의 82% 수준 이하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경우 발주기관이 저가하도급 여부를 심사해 적정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개선 방안은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공사물량이 줄고 업체수가 늘어나면서 저가낙찰과 이에 따른 적자시공 등으로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업계의 현실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